

“빛 없다” 자긍심 vs “빛 질라” 새 사업 주저

전남 시·군 ‘채무 제로’의 두 얼굴

낭비성 행사 최소화 등 예산 쥐어짜 눈물 젖은 상황

부채 강박 작용...미래 투자·지역개발 발목 잡을 수도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난 3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채무 제로(Zero)’를 선언했다. 전 군수는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낭비성 행사를 최소화해 취임 초 채무액 68억원을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부채를 없애기 위해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렸다. 체납액 관리 일원화를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폈다. 보통교부세도 497억원 더 받아내 1836억원을 확보했다.

곡성군은 앞서 1월10일 지방채 차입금 28억원을 상환, ‘빛없는 지자체’ 대열에 합류했다. 곡성군의 지방채 제로화는 눈물겨웠다. 곡성군이 지방채를 발행한 시기는 2009년 11월.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금 92억원을 빌렸다. 당시 조건은 이율 4.85%, 5년 거치 10년 상환. 만기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는 원금의 절반인 46억5400만원이었다. 유근기 군수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상품으로 차환할 것을 지시했다. 군은 2014년 8월 이율 3%인 전남도 지역발전기금에서 돈을 빌려 정부 기금을 갚았다. 이어 곡성군 장학기금 등 7개 기금을 통합한 ‘통합관리기금’이 조성된 뒤인 2015년 8월과 201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통합관리기금에서 65억원을 빌려 전남도 지역발전기금에서 빌린 돈을 되갚았다. 통합관리기금에는 연 1.75%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거치 5년 상환하는 조건이다. 전남도 기금에서 빌린 나머지 27억9600만원의 빛은 올해 1월 폐지한 4개 기금(13억3800만원)과 일반회계

■ 최근 3년간 전남 지자체 채무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남도	6529	6277	6271
목포	818	687	501
여수	858	705	576
순천	206	117	60
나주	326	289	128
광양	85	70	256
담양	-	-	-
곡성	93	29	28
구례	65	65	59
고흥	29	12	4
보성	-	-	-
화순	200	175	150
장흥	69	55	-
강진	34	18	7
해남	22	11	4
영암	59	48	14
무안	63	-	-
함평	49	300	205
영광	-	-	-
장성	145	109	89
완도	-	-	-
진도	179	166	158
신안	321	249	129

남이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산단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작업”이라며 “올해 말 산단 분양이 마무리되면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 관계자는 “명당 임대산단도 매년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이수 실종 사태’ 언제까지

정치권, 현재소장 임명 촉구

여야 정치권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8일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국회 표결을 거치지 못해 이후 한 달 이상 권한대행 신분이다. 이는 여당인 민주당이 내각 구성을 완료하기 위한 국무위원 인사청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다, 야당도 현재소장 인준안 표결보다는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5부 요인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



김이수 후보자

장이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6개월 동안 공석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결말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후보자 임명 카드는 극한 갈등으로 치달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갈등을 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당인 민주당이 ‘표결시 재적 의원 과반(150석) 찬성에 따른 가결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40석)이 애매한 태도에서 명확한 찬성으로 돌아선다면 임명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이 김이수 현재소장 임명 카드를 들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당과 물밑 대화에 나선다면 양당의 신뢰를 다시 재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후보자가 전복 고창 출신에 전남고 출신이라는 점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를 뒷받침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일각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인준안이 처리하면 되지 않는냐는 안이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여권이 김 현재소장 카드를 ‘협치 구도 복원’의 계기로 삼는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돌아온 문 대통령, 꼬인 정국 어떻게 풀까

송·조 인사 강행 여부 관심
야당 대표에 추경 협조 요청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정국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정국은 현재 꼬일대로 꼬인 상황이다. 당장 문 대통령은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업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부터 결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10일 귀국 후 공식 일정 없이 휴식 및 국정운영 구상에 돌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하루 동안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순방 기간 국정상황과 인사 문제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조각(組閣)을 마무리해야 하고 국정운영 최대 과제로 꼽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시급하다. 조직 개편안도 난항을 겪고 있다. 꼬여버린 정국 상황에도 변함이 없다. 자유한국당과 야 3당은 여전히 후보자 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잠재적 우군이었던 국민의당과의 관계는 최악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0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에서는 송영무, 조대업 후보자 임명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계속 조각이 늦어져 국정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째를 맞지만 미확정된 장관직이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명분은 있다. 여기에 외교성과로 정부 지지율도 반등하고 있어 청와대로선 순방 전보다 오히려 임명 강행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임명 강행은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안의 연쇄 불발을 부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선 11일 임명을 강행하기보다 시기를 다소 늦추며 야권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과의 순방 회동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미국, 독일 순방 등이 끝나면 여야 대표와 함께 순방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순방 성과를 논하기보다는 인사 문제를 포함, 추경이나 정부조직개편안 등 국정 운영 전반을 두고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인사 강행으로 정국이 파행한다면 부담은 여권이 더 크다. 국회의장의 추경

안 직권상정 카드도 있지만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로 확산하면서 7월 임시국회가 무산, 정국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답답하지만 대화

와 양보가 협치의 길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문 대통령이 성공적인 해외 순방에 이어 복잡하게 얽힌 정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24PY

35PY

방 3
화장실 2
주방
거실

방 3
화장실 2
주방
거실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610-9232

분양문의 (062)